

전남 섬숲 복원, 신안 팔금도서 다시 이어진다



국비 20억 확보...가시·동백나무 등 자생 난대숲 조성 유지관리·모니터링 지속...숲 경관 변화 비교·평가도

전남도는 섬숲경관복원사업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신안 팔금도 일원에 자생 난대숲을 조성한다. 섬숲경관복원사업은 기후변화와 인위적으로 훼손된 도서 해안 섬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산림생태계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기후대응 기금을 지원받아 목포 등 15개 시·군 도서 해안지역에서 총 313ha 규모의 섬숲을 조성했다.

섬숲경관복원사업이 2025년 말 일몰되면서 2026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남도는 신안 팔금도의 산림환경 복원 필요성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확보했다. 팔금도 섬숲은 2025년 타당성 평가를 거쳐 복원 수종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1월 말 산림청 중앙설계심의를 거처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업 완료 후에도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숲 경관 변화를 비교·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복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지원과장은 “섬지역 산림의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고 쇠퇴하고 있다”며 “섬숲 경관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생태계 다양성을 높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교육청, ‘행정통합’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학교·교육단체·노조 초청간담회 “교육 주제 소외 없는 통합” 강조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감이 공동 발표한 ‘행정통합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 간부, 학교급별 교·행정실장 대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학교와 교육단체, 노조 대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 공유 광주교육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표들은 행정통합 추진 시 △교육 행정의 독립성 보장 △지역 간 교직원 인사 교류 및 처우 문제 △교육 예산 배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으로 인해 교육자치가 약화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라며 “오늘 제시된 인사·행정·예산 관련 의견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

치인 만큼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진적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속의 과정을 जाएगा”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행군

청와대 정책실장·국토교통·기후에너지비서관 등 면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제도 특례 확보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는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청와대를 잇따라 찾으며 통합 추진에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특례시 출범을 전제로 한 재정 확대와 핵심 현안 해결을 동시에 꺼내 들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14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농업·자치발전·기후에너지 등 각 분야 비서관을 잇따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례 반영과 지역 현안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의 핵심은 통합특례시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통합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정 특례 도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특례시민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국세 일부를 별도로 지원하는 ‘통합경제지원금’과 통합특례(교육)교부세 지원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재정 구조 자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또 행정통합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AI·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기관·기업 이전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특례 패키지도 함께 제시했다. 통합을 계기로 산업·인구·재정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가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시도의 기대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도시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제한된 특례와 현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교통·농업·자치발전·기후에너지·중소벤처 등 분야별 비서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과 함께 전남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6차 협의체 합의로 전기를 마련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의 실행을 위해, 2월 중 무인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제7차 공약개발 종합계획에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해결과 공항 정상화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행정통합 논의의 공론화를 위해 오는 19일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통합 소통 창구도 운영 중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병내 남구청장, 행정 여정 담은 책 출간

17일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서 출판기념회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7일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지난 민선 7·8기 동안 남구가 걸어온 변화의 시간을 담아낸 저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민선 7·8기 남구청장으로 재임하며 주민들과 함께 걸어온 행정의 여정과 그 속에서의 고민, 배움,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낸 성과가 담겼다. 책의 제목인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김 청장이 평소 강조해 온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세부적으로 안전·도시재생·복지·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구가 실천해 온 변화의 과정들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남북교류, 지역 축



제 활성화, 생활 SOC 확충, 산업단지 조성과 송암산단 혁신지구 선정 등 남구의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한다. 출판기념회는 별도의 공식 기념식을 갖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 전시회, 저자와의 만남, 기념 촬영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 아닌 주민과 공직자,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기록이다”며 “잘 한 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정책도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도 공사·출연기관장으로 구성된 전남도 공공기관장협의회는 14일 나누시 소재 남도장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 공사·출연기관장, 행정통합 한목소리

공공기관장협의회 간담회...통합 지지 결의·기관 협력 논의

전남도 공사·출연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남도 공사·출연기관장으로 구성된 전남도 공공기관장협의회는 14일 나누시 소재 남도장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공사·출연기관 기관장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전남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비롯해 지역 공동 사업 발굴,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설 명절 기획전 추진 방안(남도장터)과 전남 가족친화 인센티브 발

굴(전남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한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와 함께 열린 광주·전남 행정대통합 지지 결의대회가 주목을 받았다. 참석 기관장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경호 전남도 공공기관장협의회 회장(남도장터 대표이사)은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내 공공기관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문인 광주 북구청장, 출판기념회 연기

“시도 행정통합에 집중”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위해 정장직 조기 사임을 예고했다 철회한 문인 북구청장이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도 연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출판기념회를 연기한다”면서 “광주·전남 시도통합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광주와 전남의 살길은 지역민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 통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의사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시도통합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인은 시도통합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도통합이 자치단체장 선거의 유불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득실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통합은 지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에 반드시 통합을 통해 단일 지방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시도통합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로 악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간 쌓아 온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광주·전남 시도통합에 모두 쏟아부었겠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시도통합이 시민들의 삶과 먹고사는 문제, 광주·전남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통합 논의 자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끝으로 “출판기념회를 기다리며 응원해 준 분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광주·전남 시도통합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